



런던 G-20 정상회의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 철 무역투자정책실 WTO 팀장 (cchung@kiep.go.kr, Tel: 3460-1184)
 오 용 협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yho@kiep.go.kr, Tel: 3460-1022)
 김 연 실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ykim@kiep.go.kr, Tel: 3460-1187)

1. 배경
2. 런던 G-20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3. 시사점
4.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 지난 11월의 워싱턴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린 런던 정상회의는 지난 합의안에 대한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제기된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강화,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룸.
- ▶ 이번 런던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이머징마켓의 국제금융 감독 참가권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지난 워싱턴 정상회의보다 진일보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기의 악화로 금융보호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배격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는 향후 FSB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금융규제의 개선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를 국내의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관행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야 할 것임.
-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함.
 - 한편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비준과 함께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전략적 FTA 추진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1. 배경

- 미국발 금융위기에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아우르는 국제 공조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간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로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했음을 의미함.
- 회원국 구성에서 포괄적 성격을 띠고 있는 G-20 체제는 지난 2008년 11월 개최된 워싱턴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변화된 세계경제질서를 반영한 새로운 지배구조체제로 부상함.
- 그 성과 중의 하나로, 워싱턴 G-20 정상회의 때 합의한 금융안정화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¹⁾의 회원국 확대가 금년 3월 FSF 본회의에서 확정됨.
- 이로써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개도국들이 대거 신규 회원으로 가입, 기존 선진국 위주의 의사결정체계 및 운영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옴.
- G-20 국가들이 거시경제정책의 공조에 합의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에 나선 것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감대가 발현된 것으로, 이는 워싱턴 G-20 정상회의가 이론 또 다른 성과로 볼 수 있음.

표 1. G-20 국가별 경기부양규모

(단위: 억 달러)

국 가	경기부양 규모	GDP 대비	국 가	경기부양 규모	GDP 대비
미 국	8,410	5.9%	프랑스	210	0.7%
중 국	2,040	4.8%	호 주	190	1.8%
일 본	1,040	2.2%	인도네시아	130	2.4%
독 일	1,300	3.4%	멕시코	110	1.0%
스페인	750	4.5%	브라질	90	0.5%
사우디아라비아	500	9.4%	남아프리카공화국	80	2.6%
캐나다	440	2.8%	이탈리아	70	0.3%
영 국	410	1.5%	인 도	70	0.5%
러시아	300	1.7%	아르헨티나	40	1.3%
한 국	260	2.7%	터 키	-	-

자료: Prasad and Sorkin, "Understanding the G-20 Economic Stimulus Plans."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www.brookings.edu/reports/2009/03_g20_stimulus_prasad.aspx?slideshow=1&slide=0)

1) FSF는 1999년 G-7 국가들에 의해 결성되었으며, 정보교환 활성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국제금융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은 올해 FSF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에도 가입함.

- 4월 2일 개최된 런던 G-20 정상회의는 회원국 간의 다양한 입장으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워싱턴 G-20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이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던 것에 반해, 금번 회의에서는 공동선언문에 명기된 실행방안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금융감독·규제 강화,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보장,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국제무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요 의제로 다룸.
-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G-20 정상회의의 올해 말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G-20 체제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향후 G-20 체제가 대표적인 다자체제로서 세계경제 논의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임.

2. 런던 G-20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

- 2008년 처음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에는 '금융정상회의'라 불릴 만큼 주로 금융 분야의 쟁점 사안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는 국제금융기구의 추가 자원 확충,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배격과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 지속 추진, 최빈국에 대한 지원 확대,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중시 등 다양한 이슈를 실천적으로 접근함.

- 합의문의 주요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총 1.1조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지원프로그램 마련

- 이번 G-20 정상회의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해 타격을 받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을 위해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총 8,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원키로 함.
- IMF는 총 7,500억 달러 규모의 자원을 확충하도록 함. 우선 IMF 회원국들이 2,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신규 차입협정(NAB: New Arrangements to Borrow)과 결합하여 최대 5,000억 달러까지 자금을 확보하도록 함. 여기에 2,500억 달러의 SDR을 확충하여 글로벌 유동성을 증진시키고 이중 1,000억 달러는 이머징마켓과 개도국 지원에 사용토록 함.

- 다자개발은행(MDB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에 의한 대출한도는 최소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여 저소득국가에 지원하고 모든 MDBs들이 적정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도록 함.

■ 여기에 향후 2년 동안 최소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보하기로 함.

표 2.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단위: 달러)

기관		내용	규모		
국제 금융 기구	IMF	IMF회원들에 의한 자금조성	2,500억	최대 5,000억	7,500억
		신규차입협정 (NAB)을 통한 추가자금 확보	2,500억		
		SDR할당에 의한 자금 확충	2,500억		
	MDB	다자개발은행의 대출한도 확대	최소 1,000억		
무역 금융	수출신용기관 또는 투자기관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무역금융 확보		2,500억		
총			1조 1,000억		

■ 총 1.1조 달러에 달하는 지원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통해 현 금융 위기의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함.

- 이는 G-20 체제 내에서 이머징마켓과 개도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구체적인 자금조성 안(案)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명확한 규모 또한 제시했다는 점에서 G-20의 협의 및 조정 시스템이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방증함.

2) 향후 금융안정화이사회(FSB)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야

■ 금번 런던 정상회의는 금융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안정화포럼(FSF)을 금융안정화이사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로 확대·개편하는 것에 합의함.

- 앞으로 FSB는 금융기관, 금융상품(헤지펀드 포함), 금융시장 등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담당하는 동시에, 금융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회계기준, 가치평가기준, 보수 및 보상 체계의 원칙 등에서 일관되고 단일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 G-20 참가국들은 FSB가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 리스크에 대해 조기경보 기능을 수행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제공하도록 합의함.

3) 보호무역주의 저지, 재차 강조

■ 작년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도 G-20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의 동결(stand-still)에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무역장벽 철폐와 도하라운드 협상의 타결을 주창한 바 있으나, 자국의 경제회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보호무역주의 경향의 새로운 조처들이 속출함.

- 금번 런던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조치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배격하기로 재천명하고 이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 한편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무역성장이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세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간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확보하기로 합의함.

- DDA 협상 타결이 세계경제 성장에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협상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

4) 최빈국들을 위한 국제사회안전망 확충

■ G-20 국가들은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이 현 금융위기에 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공평(fair)하고 지속가능한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과 무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500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편, 최빈국에 대해서는 향후 2~3년간 IMF 금 판매 자금과 잉여금에서 60억 달러의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함.

- 고용기회의 창출과 공정하고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육성에 힘쓰는 한편,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집행되는 재정지출이 녹색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함.

- 기후변화 위협에 대응하여 금년 12월 코펜하겐 UN기후변화회

의에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

5) 차기 정상회의 개최 약속

■ 정상들은 합의된 내용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연내 차기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함.

- 이는 G-20 정상회의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회원국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보임.

표 3. 런던 G-20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 사항

주요 합의 사항
<p>▶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기관 및 무역금융을 통해 1.1조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 ○ 재정 확장 정책 등을 통해 1,900만 개 일자리 창출, 내년 말까지 5조 달러 지출 및 4%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 녹색경제로의 이전 가속화 ○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의 배격
<p>▶ 금융 감시 및 규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안정화포럼(FSF)은 모든 G-20 국가를 포함하고 이를 금융안정화이사회(FSB)로 확대 개편 ○ FSB는 IMF와 협력하여 거시경제 및 금융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을 보고 ○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금융기관·금융상품·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시 범위 확대 ○ 중요 금융회사의 보수·보상체계는 FSF의 강화된 새 원칙 이행 ○ 경제회복 시 은행자본의 양적·질적 제고 등을 도모하며, 향후 호경기에 완충자본을 확충하고 과도한 차입을 방지하도록 규제 ○ 조세피난처 등 비협조적 지역을 파악하여 규제 강화 ○ 단일 회계기준과 가치평가에 관한 일관성 확립 노력 ○ 신용평가기관 등록과 규제 확대 및 국제행동규범 준수 확보
<p>▶ 국제금융기구 역할 보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응하여 IMF를 포함한 IFI의 역할을 더욱 강화 ○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 차원에서 8,500억 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충하는 데 동의 ○ IMF 회원들이 즉각적으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을 조성하고, 이를 NAB와 결합하여 최대 5,000억 달러로 확대 ○ 다자개발은행(MDBs)의 대출한도는 1,000억 달러까지 대폭 확대 ○ IMF, 새로운 탄력적대출제도(Flexible Credit Line) 도입 ○ 세계유동성 확충을 위해 SDR 할당을 통한 2,500억 달러의 자본 확충 ○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에 있어 IMF와 세계은행의 쿼터 및 발언권 개혁안은 각각 2011년, 2010년까지 완료 ○ 국제금융기구의 대표 및 고위직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능력에 기반을 둔 선출절차에 의해 임명
<p>▶ 보호무역주의 배격 및 세계무역·투자 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정상회의의 합의안을 재확인하고 무역·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 수출규제조치,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촉진 조치 배격, 동 합의안은 2010년까지 연장 ○ 금융시장지원 및 재정정책을 포함한 국내정책이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금융보호주의 배격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즉각 WTO에 보고하고, WTO는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보호무역주의 시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보고

- 수출신용기관 또는 투자기관 등과 협력하여 향후 2년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을 확보
- DDA 협상의 균형 잡힌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공평·지속가능한 세계경제 회복**

- 현 금융위기에 특히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최빈국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충격 완화를 위해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을 약속
- 저소득 국가들의 사회보장 및 무역증진을 위해 500억 달러 제공
- 향후 2, 3년간 최빈국에 대한 신속적인 무상원조를 위해 IMF 금 판매 자금과 잉여금에서 60억 달러 제공
- 건전한 노동시장 육성과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및 새로운 저탄소 사업 기회 확대에 노력

자료: The London Summit 2009 (www.londonsummit.gov.uk)

3. 시사점

1) 금융규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의 퇴조

■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내용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규제의 강화임.

- 특히 유럽권을 중심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신용파생상품, 조세회피처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개선되었고, 미국도 이에 동조함.

-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부실자산은 회계장부상 자본투자(equity capital) 부분에서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상각 후 자기자본비중이 BIS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정부의 자의로 이를 확충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됨.

- 따라서 희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정부가 희생의지를 보이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게 됨.

○ 부실자산 정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와 민간합동투자프로그램(PPPIP: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Program)을 통해 부실자산의 평가와 자본의 확충 기준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발표함.

○ 또한 만기가 있는 유동화대출상품 등을 통해 주택보유자의 모기지 부채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안정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금융규제의 강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의 개발과 금융시장 감독 행태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임.

- 금융상품 가격 결정에서 수익률보다 리스크관리 수준이 금융상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등장할 것으로 보임.
 - 금융감독 부문에서도 G-20 국가가 FSF 등과 같은 주요 국제 금융 감독기구의 회원국으로의 가입이 허용되었고, IMF 내 지배구조에도 이머징마켓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금융 감독 과정에서 이머징마켓의 의견이 수용되는 길이 열림.
-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많이 제거하였으나,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회계기준, 헤지펀드 규제 등 국제금융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규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됨.
- 단,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본 개념이 규제체제의 일원화 및 효율화이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신(新)금융규제와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2) 경기부양정책 국제공조의 한계

- G-20는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그룹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무역량의 감소와 국내경기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각국별로 재정확대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글로벌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함.
- IMF는 2009년도에 G-20 전체 평균으로 GDP 대비 3.5%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선진국 그룹은 평균 7% 수준, 이머징마켓은 평균 3% 정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글로벌 경기부양책의 공조가 필수적임.
- 그러나 재정지출의 국제공조는 국가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그 조율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미국과 영국의 주도하에 일본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안, 즉 각국별 재정확대 규모를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더 증가시켜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가 존재함.
 - 대외부채 규모가 대외채권 규모에 비해 높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재정지출의 증대가 직접적으로 수입증가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국내 경기 부진과 실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의 대폭적인 증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 반면, 유럽의 경우 유럽단일경제권 정책의 하나로서 경기후퇴 시 자동안정화정책(automatic stabilizer)을 시행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미 유럽연합 전체 GDP의 3.3%(4,000억 유로)를 재정정책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유럽연합의 중장기적 재정운용정책 기조인 ‘안정 및 성장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의 운영계획을 벗어나게 되므로 이행이 어려운 상황임.
- 게다가 대외적으로 순 채권국가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과도한 부채증권 발행이 환율 등의 변화를 통해 자국의 재정확대로 인한 부채증가 효과를 상쇄할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핀란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호주, 중국, 독일 등 대외 순 채권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지출을 늘리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대외 순 채무국가의 경우에는 저축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또한 원유수출국가의 경우에도 오일머니를 재정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3) 금융보호주의에 대한 경계

- 금융보호주의(financial protectionism)라는 용어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씨티그룹 등 자국 은행들에 대해 해외대출을 억제하고 자국의 기업대출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지칭한 데서 시작된 용어임.
- 선진국 금융기관이 호황기에 개도국에 자본을 투자했다가 불황기에는 개도국의 사정에 상관없이 자금을 회수하여 개도국의 유동성 부족을 촉발하거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자국통화의 고의적인 평가절하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금융보호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인물은 영국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총리로서,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이머징마켓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보호주의의 첫 단계로, 궁극적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보호 무역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금융보호주의가 심해지면 한국, 브라질 등 신흥시장 국가들은 외화 차입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달러 부족 사태를 겪을 우려도 존재함.

- 금융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2009년도 이머징마켓으로 유입되는 민간자본의 투자 규모는 2007년보다 82%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제금융기구(IIF)의 추산에 따르면, 특히 올해 동구권 국가에 유입되는 자금은 작년의 2,5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새로운 은행규제방안, △경기부양자금의 자국산 제품 사용 의무화 조항 금지 등 금융보호주의를 저지하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은 고무적이거나, 보다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금융보호주의를 효과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4) 보호무역주의 배경 재확인

■ G-20 정상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모든 조치를 배격한다는 데 합의한 것은 무역자유화를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사항임.

- 세계경기의 악화로 세계 교역량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촉발된 관세보복조치라는 대공황 당시의 역사적 경험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 무역과 투자를 저해할만한 요소가 있는 조치에 대해서 WTO에 통보키로 하고 WTO의 감독과 공시 기능을 마련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조치들을 저지하는 데 일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5) 무역금융 지원의 확대를 통한 세계 무역 활성화

■ 세계교역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역금융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2,5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세계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세계적인 신용경색에 따른 무역금융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무역활성화의 당면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자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음.

- 브라운 총리의 제안금액보다 확대된 규모로 무역금융 자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무역에서의 신용경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6)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공동 노력

■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DDA 협상타결이 시급하며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DDA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정 초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2008년 12월 각료회의 소집이 무산된 주요 원인이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개도국간의 큰 입장 차이였음을 감안할 때 이들 주요국들이 포함된 G-20 정상회의에서의 원칙적 합의는 향후 DDA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는 주요국간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G-20 비회원국인 개도국들이 향후 DDA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존함.

4. 향후 과제

■ 이번 런던 정상회의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강화 추세의 지속, 이머징마켓의 국제금융 감독 참가권 확대에 대해 회원국간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는 점에서 지난 11월 워싱턴 정상회의에 비해 국제금융시장 개혁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아직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국제경기불황에 대한 재정정책 공조노력 부분에서 회원국간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였음.

- 또한 IMF의 자본 확충을 통한 유동성 공급안이 제시되었으나 조건부 대출기준(conditionality)이 여전히 유효하고 긴급사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특히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역할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FSB 등 국제금융 감독 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제금융규제의 개선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국제 금융시장의 규제를 국내의 금융 시장 및 금융기관 관행에 신속하게 접목시켜야 함.

■ 이와 함께 G-20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 단기유동성 공급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G-20 체제와는 별도로 동아시아 차원에서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동아시아가 전 세계의 저축고 역할을 하고 있어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의 자본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역내 경제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역내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동아시아 통화스왑의 규모와 다자화 및 이를 위한 감독 기구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G-20 차원에서도 다자 또는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음.

■ 보호무역주의의 배경과 무역금융 자원 마련은 감소세를 보이는 세계 무역을 활성화 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무역 관련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WTO에 통보키로 하고 WTO의 감독기능을 촉구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사항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새롭게 조성된 무역금융 지원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 원칙적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은 환영하지만 실제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가 남아있으며 어떻게 쟁점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음.

- 2008년 12월 각료회의의 무산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던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협상입지 악화 문제가 해소되었으며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재능력과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는 향후 DDA 협상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DDA 협상 재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다보스 포럼이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의 선언적 합의가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 조정을 요하는 DDA 협상 진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음.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DDA 협상타결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주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DD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한편 DD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FTA의 비준과 함께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역량을 기울이는 등 전략적 FTA 추진 확대를 통한 무역자유화 정책의 다변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KIEP**